

■ 광주·전남지역 정·관가 초긴장

“부당 수령 공무원 최소 두자리수” 파다

논소유 광역의원·기초단체장 수령 여부 관심

“혹시 지역 국회의원도 ...” 민주당 집안 단속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 파문이 정국의 뇌관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 정·관계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국회의원 2명의 직불금 수령 사실이 밝혀지고 직불금 부당 신청 건수와 의심 필지가 공개됨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정치인들과 고위 공직자들은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대한 직불금 신청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등 크게 술렁이는 모습이다.

◇지역 국회의원=지난 14일 저녁, 논을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당 지도부로부터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신청한 적이 있는지는 긴급 전화를 받았다. 자칫 직불금 부당 수령 파문의 불똥이 민주당으로 튕겨올 수 있는 당 지도부가 긴급 확인에 나선 것이다.

16일 당내 조사 결과, 1천㎡이상의 논을 소유하고 있는 의원은 10여명으로 나타났으나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의원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민주당 소속 1~2명이 직불금을 수령한 것 같다는 설이 흘러나오고 있어 아직까지 긴장감은 풀리지 않고 있

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직불금 지급 대상인 논을 소유한 의원은 주승용(10,304㎡), 이용섭(6,574㎡), 김재균(4,945㎡), 이윤석(3,848㎡), 서갑원(3,137㎡), 박주선(2,130㎡), 김영진(635㎡), 김동철(224㎡), 박상천 의원(16㎡) 등 모두 9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9명의 지역구 의원들은 직불금 부당 수령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많은 논을 소유한 것으로 집계된 주승용 의원과 이용섭 의원의 경우, 본인은 물론, 직계가족, 친인척까지 확인했으나 직불금 부당 신청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이윤석 의원은 자신의 논을 경작하고 있는 둘째 형이 직불금을 수령했으나 이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역 정·관가=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고위 공직자들도 쌀 직불금 파동을 예의 주시하며 사실 확인을 하는 등 지역 정·관가도 술렁이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에서 직불금 부당 수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거듭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광주·전남지역 직불금 부당 수령 건수(1004건)와 아울러 직불의 부당 청구 의심 필지 수(3만485필지)가 공개되면서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당장 지역 관계에서는 최소한 두 자리 수 이상의 공무원이 직불금 부당 수령 대상자에 포함될 것이라는 설이 파다하다.

특히 지역 광역의원 40명과 기초단체장 10명이 직불금 수령 대상 논을 소유한 것으로 조사돼 직불금 수령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직불금 부당 수령은 농지가 접해 있는 전남도와 전남지역 자치단체보다는 광

주시와 광주지역 자치단체 공무원이 더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각 구청과 면사무소는 이날 하루 밀려드는 직불금 수령 여부 확인 전화에 몸살을 앓았다. 이를 반영하듯, 일부 각 구청과 면사무소 직불금 담당자들은 아예 자리를 비우기도 했다.

광주지역 모 고위 공무원은 “청와대에서 직불금 부당 수령에 대한 철저한 조사 입장을 밝힘에 따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직불금 부당 수령이 밝혀질 경우 정계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아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말했다. /연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쌀직불금 수령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며 고민하고 있다. /연동욱기자

‘직불금’ 정국 뇌관 급부상

한나라 의원 2명 이어 정치권 연루 인사 거론

與 “전액 환수” 野 “국조 추진”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정 수령 파문이 정국의 뇌관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에 이어 한나라당 국회의원 2명의 직불금 수령 사실이 밝혀지고 정치권내 추가 연루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여야는 특히 이번 사태의 잠재적 폭발성을 의식, 한 목소리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으며 한나라당은 부당 직불금의 전액 환수에, 야권은 이 차관의 경질과 조속한 국정조사에 각각 무게 중심을 두고 공세를 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직불금 제도가 시작된 2005년부터 예산이 얼마나 부당하게 집행됐는지 모두 조사해 잘못 지급된 것은 환수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부당집행액 규모를 5천억원이라고 공개한 뒤 “가장 먼저 할 일은 노무현 정권에서 잘못 집행된 쌀 직불금부터 환수하는 절차를 취하는 것”이라며 사태의 책임 소재를 참여정부 쪽에 실었다.

또 그는 “직불금 파동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불금을 수령한 전 공무원을 소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는 마녀사냥식 접근은 안 된다”며 사태의 전개 양상에 따라 현 정권에 미칠 부정적 파장을 경계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권 3당은 15일 사태의 진상을 밝혀내자며 국조 추진에 합의했고, 국조 특위 구성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하자고 한나라당에 제안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번 문제는 여야 아, 과거정권과 현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과 도덕의 문제로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이 차관의 해임과 직불금 수령자의 명단 공개를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이날 불교방송에 출연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거짓말해 직불금을 타간 것은 도둑질과 마찬가지로 아주 나쁘다”며 직불금 수령 고위공직자의 명단 공개와 국조 추진을 주장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직불금 부정수급 사례를 조사·공개한 감사원에 대해 17일 추가 감사를 실시해 조사내용과 부당수령자 명단, 감사공개 지연 경위 등을 추궁하기로 했다. /연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부당 수령 고위공직자 명단 공개하라”

전남지역 농민단체·참여연대 등 촉구

전남지역 농민단체와 참여연대 등 전국구 단체들이 쌀 직불금 부당 수령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고위공직자 명단 공개를 촉구하는 등 분노하고 있다.

16일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은 오는 20일 예정된 전남도청 앞 비야적시 때 직불금 부당 수급에 대한 철저 수사를 촉구키로 했으며, 참여연대도 논 소유 고위공직자 16명의 부당 수령 여부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전남 광주전남연맹은 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되면 지역 공무원들의 비리도 속속 드러날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계획이다.

그렇지 않아도 생산비 폭등에 농산물 가격 하락까지 겹쳐 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들이 곳곳에서 출하거부를 결의하고 있는 가운데 직불금 파문까지 일어 농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크다고 농민회는 전했다.

직불금 부당수급 파문의 근본 원인은 정부가 농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비농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자유전의 원칙을 깨뜨린 데 있다는 것이 농민회의 시각이다.

또 농지전용이나 임대농과의 부당한 계약

등을 통해 부재자주도 손쉽게 직불금을 타낼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제도의 허점도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16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쌀 직불금 부당 수령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에 논을 보유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16명은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여부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관보에 게재된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를 종합한 결과 한승수 국무총리와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등 장·차관급 공직자 16명이 논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은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았는지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한 총리는 강원 춘천 서면 금산리 391번지에 1천950㎡ 크기의 논을 소유하고 있으며 강 장관도 경남 합천군 대양면 아천리 251-1번지에 1천460㎡의 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2명 외에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이만의 환경부장관, 배용수 청와대 부대변인, 천세영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우형식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이 논을 소유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부정 수령 공무원 징계 어떻게

‘쌀 소득보전 직불금’ 논란과 관련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상당수가 직불금을 부정수령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들의 징계 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공무원징계령 등에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가운데 5급 이상의 징계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에, 6급 이하의 부처별 징계위에서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광역·기초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은 단체나 기업별 인사위에서 징계를 결정한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에 대한 징계는 소속 장관이 중앙징계위에, 6급 이하의 소속 기관장이나 상급기관의 장이 관할 징계위에 먼저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징계절차가 개시된다.

지방공무원들은 임용권자인 단체장이 징계

의결 요구권을 갖고 있다.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은 자체 조사나 수사 결과, 다른 부처나 지자체 공무원에 대해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무원징계 처분요구서나 범죄처분결과통보서 등을 첨부해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사실상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명에 의한 각종 감사 결과에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직접 관할징계위에 징계의결요구서를 낼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들이 망라된 이번 사안의 경우

총리가 각 징계위원회에 일괄적으로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징계위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중앙징계위원회는 60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의 진술이나 증인 심문 등을 거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징계위는 징계를 결정하면 지체없이 징계요구자에게 이를 통고하고, 각 기관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를 집행해야 한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 양형은 각 징계위가 대상자의 비위 유형과 정도, 과실 여부를 참

작해 결정하게 된다.

현재 공무원의 징계대상 비위 유형으로는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 금지, 친절, 공정성의무, 비밀엄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집단행위 금지 위반 등 9가지가 규정돼 있다.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은 이를 비위 유형 중 ‘성실의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공무원이 과실로 직불금을 불법수령한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징계가 내려진다면 경징계보다는 중징계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연동욱기자

중앙·지방 망라 ... 총리가 일괄 요구 가능성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모두 중징계 될 듯

아모레퍼서픽이 꿈꾸던 그 아래따음이 태어납니다

ARITAUM